

익산 주택수급정책 '적절'

어울림엔지니어링 · 단국대 전문가 연구팀 등 진단

익산시의 2030년까지 주택 수급계획이 적절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지만 중장기적 주택수급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용역기관인 (주)어울림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익산시의 2030년까지 연도별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 예정량에 대한 분석 결과, 주택수급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어울림엔지니어링은 (사)한국주거학회 부회장 홍경구 교수 단국대 연구팀과 전북연구원 오병복 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 진행된 익산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익산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조했던 아파트 공급이 2020년 이후 부동산 활성화로 공급이 증가하자 과잉공급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익산시의 총량관리제에 대해 현재 익산시 주택보급률은 104%로 전북 평균 110%보다도 낮은 상황이며 주택밀실 및 노후주택 내구연한에 따른 주택 감소분 등을 고려해 익산시가 추진 중인 '총량관리제'에 따른 예정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1~2인 가구 수 증가 추세와 시 전체 아파트 중 72%가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침체기 속에서도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



보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인구수 및 가구수 미래추정 등 면밀하게 주택 및 이주수요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전북 평균 주택보급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정된 주택 수급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환경이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 각종 변수들로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2030년까지 시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인간 존엄과 성숙한 임종문화 기대"

익산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28일 시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활성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홍보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협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소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각 읍·면에 소재한 14개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업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말 익산시 보건의소의 상담건수는 7,105건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내년 국가예산 · 신규시책 제2차 발굴 보고회

군산시, 신규 국가예산 43건 2조7004억원 규모 발굴

군산시는 28일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국가예산 및 신규시책 제2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오는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는 43건(경제분야 12건, 문화분야 8건, 복지분야 5건, 건설분야 4건, 농업분야 12건, 상하수도분야 2건)에 총사업비 2조 7,004억원 규모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으며, 신규시책은 42건에 94억원 규모

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번 발굴된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친환경 소재 적용 소형선박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국가어항(개야도항) 개발사업,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부잔교) 보수,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농촌 치유마을 조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등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2건의 신규시책도 함께 발굴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협력강화 사업, △군산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약속(속) 달력 배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대행 체

계 구축, △예술단 이카데미 사업 등이 보고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예산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군산시-전북도-정치권 공조를 강화해 예산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재정부는 건전 재정 기초를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민의 특색있는 사업발굴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 추진 논리 개발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군산시는 28일 2023년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 지원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상향 조정돼 약 162만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는 별도

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센터로 상시 신고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새해 농업인 신기술보급 실용교육

익산시는 '2023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이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영농 신기술 보급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교육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식량작물(벼, 밀, 논콩),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2개과정 6차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춰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새롭게 변화하는 농정 이슈와 공익작물 의무교육 등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올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군산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로 전라북도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9월경 농민수당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185농가에게 49억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8,605농가를 대상으로 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카드는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추서 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농자재값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